

안전과 보건은 정책이 아닌 사람을 위한 실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산업안전팀 주무관

황 규 상

이달의 한마디 

“사람입니다. 산업보건과 안전은 결국 제도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닿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정책을 맡고 있는 황규상 주무관은 지난 3년간 발로 뛰며 산업보건과 안전의 기초부터 새로 쌓아온 주인공이다. 그는 말한다. “보건과 안전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단지 법적 책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지역과 지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의 고민과 실천을 들어봤다.

글 장현수 인천센터 사내기자 사진 강권신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산업안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규상 주무관입니다. 산업안전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4조의3에 따라 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는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개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노동 안전보건자문위원회와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 점검, 소규모 사업장 대상의 점검 및 컨설팅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건관리’라고 특정하진 않지만,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보건·안전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지자체는 산업안전과 관련해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 감독과 처분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기 때문에 처치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인천시는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전보건공단,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는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등을 무료로 지원하며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안전보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이 사업장 전체,
숲을 본다면, 노동안전보건은
종사자 한 사람 한 사람,
나무를 봅니다.

”



지자체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자체에 ‘책임’만 있고, 따르지 않았을 때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해도 강제력이 없다 보니 사업장에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구조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따라서 향후 법 개정이나 행정적 시스템 정비를 통해 지자체에 보다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행사는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만의 안전보건 행사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했습니다. 사실 예산도 넉넉하지 않았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

천테크노파크, 인천노동권익센터 등과 협업해 시상식, 특강, 토론회 등을 공동 주관 형식으로 진행했고, 준비 기간만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지역의 산업안전보건 의제를 공론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는 다른 지자체와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인천시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 2기 20명이 활동 중입니다. 특히 저희는 민간 건설현장과 소규모 민간 사업장까지 점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주로 공공 발주공사 위주로 활동하는 반면, 인천시는 ‘지원 중심’ 접근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점검과 동시에 실질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도 저희를 ‘도와주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장 접근 방식에서부터 구성원의 전문성까지, 인천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는 지역 현실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철학이나 원칙은 무엇인가요?

‘사람’입니다. 산업보건과 안전은 결국 제도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노동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보건과 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많아 자칫 방치되기 쉬운데, 그럴수록 더욱 철저한 예방과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개인의 안전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수행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현장에 나가 “도움을 받아 고맙다”, “몰랐던 걸 알게 되어 좋았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민간 사업장은 처음엔 왜 시에서 왔으며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점검이 끝난 후에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주십니다. 거절당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건 공무원으로서 정말 큰 보람이고,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향후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안전보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이 사업장 전체, 숲을 본다면, 노동안전보건은 종사자 한 사람 한 사람, 나무를 봅니다. 인천시에서 이 업무를 노동정책과가 맡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적 의무와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실제로 보호하고 예방책의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은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주를 등한시하는 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에는 사업주의 재산과 사업장 가치를 보호해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목표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 지도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여건상 미뤄지는 사업도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정책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특히 인천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인천센터가 생긴 시점부터 함께 해왔고, 협회 구성원들 모두가 늘 열린 태도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특히 센터장님을 비롯한 구성원들과는 협업하면서 신뢰도 깊어졌고, 지역 산업보건 파트너로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산업보건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크고,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산업보건 현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인천센터의 지속적인 성장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